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2-08 / 2002년 8월 28일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평가

朴鍵一

중국사회과학원 조선반도문제연구센터 상무부주임

I. 발표요지

1. 경제제도 변화의 내용

□ 북한이 사회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전제하에서 효율을 최대한 향상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관리방법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경제조정조치는 주로 대폭적인 물가 및 임금 인상을 포함함.
- 물가 인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량가격을 원래의 1kg당 0.08원(북한 圓)에서 44원으로, 일반 산업노동자의 평균 월급을 11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함.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 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 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2. 제도변화의 배경

□ 북한의 이같은 경제조정조치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임.

- 과거 북한 경제생활의 많은 분야는 주로 국가정책에 의해 보장되어 왔음.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는 농민으로부터 0.8원/kg의 가격으로 식량을 수매하지만, 국가재정보조를 통해 0.08원/kg의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음.

- 이러한 정책이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한 면도 없지 않지만, 동구와 구소련의 사회주의시장 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재정에만 의존한 경제운영메커니즘은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음.

○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경제난으로 국가재정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 정상적인 생산이 어렵고, 수급모순이 더욱 심각해짐.

□ 북한은 1998년 8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국가발전의 모토로 세우고 “자력갱생”의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고도로 집중된 중앙계획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함. 즉,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면서 실제 이익을 중요시 함.

- 이와 동시에 기업자주권 확대 및 종자 개량, 감자 재배, 이모작 재배, 농작물 간작(間作) 등에 관련한 경제회복과 생산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했음. 1999년 북한경제는 9년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시현함.

□ 지난해부터는 경제관리 강화와 경제효율 향상을 위해 “노동에 기초한 분배”이라는 차등 분배조치를 실시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독립채산제”를 실시함.

- 과거에는 작업 성과와는 관계없이 명목상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아왔으나, 새로운 관리방법에 따르면 기본 생산량을 달성한 후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협작농장에서는 과거 작업반을 계산과 분배의 단위로 하고, 작업반 아래 3-4개의 소조들이 노동성과와 관계 없이 작업반 범위에서 평균 분배를 받았음.

- o 새로운 관리방식하에서는 과거 작업반채산제 및 소조관리제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소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게 됨. 협작농장의 가장 기초적인 생산단위는 여전히 작업반이지만, 계산단위는 종전의 작업반에서 15-20명으로 구성된 작업 소조로 바뀌었으며, 작업반은 각 소조의 노동성과를 산출한 후 이것을 기초로 각 소조에 분배함.

□ 그러나 이러한 중대 조치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 정부는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물가체제를 개혁한 것임.

- 원자재와 생산설비 가격을 제대로 확정하지 않으면 기업과 협작농장은 생산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체제의 신속한 합리화가 급선무임.

- o 금년 7월부터 시작한 물가 및 임금 조정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임.

3. 가격조정 조치의 특징과 목적

□ 이번의 가격조정 조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음.

- 제품 가격은 생산원가와 수급관계에 의존하는데 과거에는 국가재정지출에 의한 생산원가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현재는 제품의 실제 가치를 전반적으로 산출해 수급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 물가조정의 핵심을 인민생활의 필수품인 식량가격의 조정으로 하고, 먼저 식량과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했음.

- o 새로 확정된 식량가격은 그 실제가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물, 전기, 화학비료, 농업용 비닐 등 투입을 계산해 식량의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국제시장의 식량가격과 조선 국내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제정한 것임. 이를 기준으로 하

여 조선은 모든 제품의 가격을 새로 제정했음.

- “생산자를 중심으로” 물가를 조정하였음. 과거 북한의 가격체제는 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졌음.
- o 최근 몇 년간 경제난 및 생산의 비정상화로 인해 월급과 물가간의 모순이 두드러져 이중 가격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생산자 중심”의 가격조정은 바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 생산확대와 경제회복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농업분야에서는 금후 농민에게 제공한 농업용 물자도 과거와 같은 거의 무상 제공수준에서 실제가치에 따라 가격을 제정할 것임.

□ 임금조정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들 수 있음.

- 식량구입 비용과 주택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다시 산출해 노동자의 임금 기준을 확정했음.
- “생산을 확대해야 수급모순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생산량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불함. 또한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차별적인 임금을 지불함. 예를 들어 채굴분야 노동장의 기본 월급은 6,000원까지 지불할 수 있음.
-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동시에 농민으로부터의 식량수매 가격을 0.8원/kg에서 40원/kg로 대폭 인상해 임금인상 조치의 혜택을 전지역으로 확대함.

□ 북한은 이번의 물가 및 임금 조정 조치가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물가는 인상되었지만 국가가 인민의 식량문제를 보장해 주는 정책은 유지되기 때문임. 즉 배급표를 발급하여 중전과 같이 노동자가 월급으로 식량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함.

- 국가에서 식량수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향후 농민의 생산적극성이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북한 당국은 농작물 재배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농업생산구조를 합리화시킴으로써 100만 톤 정도의 증산이 가능하다고 예상함.

4. 향후 개혁 전망

□ 이번에 실시된 전반적인 물가와 임금 조정은 북한이 과거 수십년 동안 유지해 온 경제운영모델을 개혁하기로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물가와 임금의 개혁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기존체제와의 충돌에 의한 갈등이 계속 나타나 금후의 경제조정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1998년 8월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이라는 국가발전 전략목표를 세움으로써 경제개혁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는바, 금후 기존의 경제관리모델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금후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에 따라 외자유치 환경 개선과 관련된 후속 개혁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환율조정과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규 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북한은 안정적인 경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국제관계, 특히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임.

- 현재 북한이 한국, 일본,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평화전략을 취하는 것이 그 증거임. 따라서 북한의 경제조정 진전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II. 토론요지

問: 북한의 토지개혁은 중국처럼 자류지(自留地)를 내주는 식으로 할 것인가?

答: 북한은 70년대에 토지 수확물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상납하는 분조제 형태를 취했다가 수확물을 모두 국가에 바치는 협동농장 형식으로 바뀌어 왔음. 현재는 다시 분조(수확물의 25%를 국가에 상납)로 바뀜. 농민의 의식도 적극적으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

問: 현재 북한은 금융시스템 개혁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돈의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리한 금융시스템을 필요로 함. 중국과 북한 간 무역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결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북한이 조만간 금융시스템을 개혁할 것으로 보는가?

答: 실제로는 중국과 북한의 무역규모는 상당히 적음. 주로 변경무역이고, 丹東을 거친 변경무역이 총 무역의 70%를 차지함. 따라서 은행을 통한 결산이 아니라 직접 현금거래를 함.

금융시스템의 개혁은 북한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가능할 것임. 현재로서는 외자유치를 위한 환율 조정과 새로운 외국인투자법규 출시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問: 김정일의 개혁의지가 얼마나 있고 도와줄 개혁엘리트가 있는가, 그리고 북한의 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가?

答: 북한의 개혁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했을 때보다 큰 폭으로 진행되고 있음. 북한에 김정일을 도와줄 사람도 적지 않음. 김정일은 현재 기술관리, 정책관리, 연구소 사람 등을 지방으로 보내서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과거 북한은 제도 제일, 수령 제일, 군대 제일, 사상 제일의 4대 원칙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경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이는 중국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맑스레닌주의, 공산당 지도, 사회주의제도, 인민민주독재 등 4개 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동시에 견지하였던 것과 유사함. (***)